

특별기고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지난달 21일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하는 '창의적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상업지역 40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30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층수제한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광주 특성 담긴 규제 발굴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제(Le Corbusier)는 건폐율을 5%로 줄이고 60층 건물이 숲을 이루는 도시구상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3년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올림으로써 일조,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30층, 40층, 50층이라는 층수만을 중심으로 한 기준설정은 도시경관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 건축물의 층수는 용적률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핵심사항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용적률의 변화 없이 층수만을 제한한다면 개발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작고 평범하면서, 한편으론 볼품없는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우리시는 구릉지가 많고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다. 또 군공항으로 인해 송정지역에서

특색 있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상무, 수완, 첨단지구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최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는 단조로운 층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단조로운 층수를 양산하는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은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심과 배후산지, 수변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로막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는 난개발을 비롯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건축과 도시설계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경관 문제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도시경관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2040 도시경관계획', '광주시 건축물 심의기준', '녹색건축설계기준' 정비와 제정이 완료되는 5월경, 상업지역 40층 이하, 주거지역 30층 이하로 정해져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관리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동일 용적률 범위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각동로와 바람길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차등적인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와 경관설계의 기준이 되는 2040 도시기본·경관계획에 도시의 입체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올해 4월에서 5월경 완료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단 건축물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 해당지역 특성 부합여부, 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자인 향상과 난개발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통합심의제도 신설'은 우리시 높은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우수디자인 적용사업에 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신설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 설계과정에서 디자인 분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합심의 운영기준 등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공모 등의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 시설 제공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

수려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확대를 유도해 거주민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과정에서 시민과 관련단체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다.

도시의 변화에 맞게 관련 제도도 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광주가 '도시경관과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쉼터도시 광주'로 거듭나도록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여문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창작소 건립 필요

립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청년과 관광객 유입을 유도해 여문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여수는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의 도시다. 하지만 여수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차별화되고 양질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수는 차별된 콘텐츠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예술창작소는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바꿔 예술공연, 상설기획 전시와 시민 예술 체험 교육 및 아트마켓 등을 활용하는 곳으로 지역민은 물론이고 청년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한다면 관광객이 여수를 다시 재방문해 체재해 있는 여문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수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수시민은 휴일에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취미, 자기개발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단순한 휴식보다 질 높은 문화 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창작소가 건립된다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수시민의 문화 행복 지수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여수에서 진행되는 문화 콘텐츠

사업과 연결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수에서는 버스커 공연이 활성화돼 있고 오는 2024년 전남청년미디어센터 건립이 예정돼 있다.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창작소에서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콘텐츠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콘텐츠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완성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문수지구 에 생길 전남시청지미디어센터와 연계해 직접 방송제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수만의 문화 콘텐츠는 활성화되고 특히 이를 제일 잘 활용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다면 여수의 미래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마침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0개의 미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여수시는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창작소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姜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관리국 (062) 720-1012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영호남 관광 남도해양열차 환영한다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도해양열차(S-Train)가 등장하고 이 열차가 영호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 남해안 핫플레이스를 둘러보게 하는 여행상품이 나온다고 한다. 부산관광공사가 나서 새로 개발하는 해양열차 상품은 부산역-광주 송정역 277.7km 구간을 달리는 열차를 이용해 광주와 전남, 부산, 경남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돌 수 있다고 한다.

남도해양열차를 이용한 영호남 여행상품 개발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최근 광주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가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영호남 교차 여행상품 개발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다음달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마산, 부산 등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선보일 수 있다.

여행업계에서도 이번 광주비엔날레와 남해안 주요 관광지를 아우르는 1박2일 또는

2박3일 여행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꿈이 부풀어 있다. 실제 이 같은 상품이 첫 선을 보이면 대박을 터트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 자체가 관광지인데다 비엔날레와 남도축제 등이 결합하면 어느 국내 여행상품도 비견될 없는 프리미엄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여행상품은 단순히 관광의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 동서화합의 상품이란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과 과밀화될 막을 방안을 백방으로 준비하고 있는 때다. 영호남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해안은 뛰어난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뽐내면서 영호남 교차 관광 향양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폭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주마마편 격으로 남도해양열차 상품을 내놓으면 수요가 폭발적일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야심찬 영호남 관광열차 여행상품을 환영한다.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원점서 이뤄져야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검토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대대적 개편 방안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가 이해당사자인 매우 중요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좀 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설득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

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개념인데, 제도를 약화할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의 노동 여건만 악화시킬 것인바 의견이 대다수다. MZ세대 절반 이상이 선호하는 근로방식이라는 데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조차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편안 도입은 시기상조며, 국제사회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 개편안이 자칫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것이다.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하대하는 풍토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뤄질 보완 검토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

대학가 '사이비 주의보' 적극 대처를

기지사침



김혜린

사회부 기자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사이비 종교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광주·전남에도 일반 교회 등으로 위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지역 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이비 종교 교주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를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담았다. 이 중 JMS 편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JMS 교회와 신도를 색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JMS 피해자 카페를 통해 공유된 '전국 교회 주수' 명단에 광주 3개, 전남 8개 교

회가 포함됐다. 특히 각종 SNS를 통해 퍼진 대학별 위장 동아리 명단에 광주 소재 2개 대학의 3개 동아리가 포함되면서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새내기를 겨냥한 포교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학교명이 언급되며 사실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우리 학교에도 JMS 동아리가 있다' 등 JMS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사라졌거나 총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공식 모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식 동아리 역시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더러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캠퍼스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공간이며 모든 종교 활동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학교는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의 단호한 대처일 것이다. 그저 학생들은 '해당 동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 '관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등 학교의 분명한 입장을 통해 안심하고 싶은 뿐이다.

실례는 마음속으로 학교에 온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순찰 강화 및 유사종교 경각심 고취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